

AI 기술, 교통·도시 전반에 적용한다

국도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수립... 5대 모빌리티 분야 혁신 전략 담아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사진)은 26일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 는 지적도 제기됐다.

리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았으며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7년 AI 기반 레벨 4 안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2026년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 200대 투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증 → 데이터 수집 → 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하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주행 관제·대

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

도심형용 모빌리티는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부터 시작하여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본격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체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배터리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도 구축한다.

U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 → 초기상용화 → 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의 국산화를 위해 소방, 항공, 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및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을 대폭 확대한다.

탄소중립 모빌리티는 신차 중 친환경 경차 비율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 달성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 를 지원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 등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인다.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 검사제도 시행한다.

그 밖에 수소 전세버스 차량연환을 완화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소열차 실증 하이퍼루브 테스트 베드 착공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도입을 지원한다.

일상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도입 준비와 공공플랫폼 구축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법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를 강화한다.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한다.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으로는 3D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장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모빌리티 국가적 법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 등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권희성 기자

자치도의 미래를 열



26일 전북을 방문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오른쪽)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전북의 상생과 협력 시대를 정취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서 '통합의 가교' 역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전북 방문... 종교·지방정부 면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장은 26일 전북을 방문해 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을 찾아 국민경청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 원불교 왕산 성도종 종법사를 예방한 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면담하는 등 종교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바쁜 현장 소통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연 위원장은 관련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청취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위기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정책은 핵심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한 사람의 회복은 한 가정의 행복이자, 사회 통합의 씨앗"이라며 기간 간 유기적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원불교 왕산 성도종 종법사를 예방해 국민통합의 철학적 기반과 사회적 실천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과 성도종 종법사는 세대, 이념, 계층 간 갈등 완화 노력, 사회적 약자 보호, 세대 간 공감 확대, 지역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통합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을 잇는 가치와 실천이 함께해야 한다"며 종교계가 지닌 포용과 화합의 정신은 통합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석연 위원장은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전북의 상생과 협력 시대를 정취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 통합을 연계한 공동체 회복 협력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통합위는 앞으로도 사회 각 영역과의 연대를 확대해 갈등을 조정하고 공감의 기반을 넓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더임실, 더불어 김진명' 통해 지역 미래비전 제시

김진명 입실군수 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 군민회관서 성료

김진명 입실군수 출마예정자(더불어민주당)의 출판기념회가 26일 입실군민회관에서 정계 인사와 지역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김진명 입실군수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26일 입실군민회관에서 정계 인사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 출마예정자는 저서 '더임실, 더불어 김진명'을 통해 지역 주민 소득 향상과 지방소멸 극복을 핵심으로 한 입실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행사장에는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과 심민 입실군수, 장종민 입실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박희승·추기에·박찬배·서영교·전현희·이건태·한준호 국회의원, 이상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 최고위원 등이 영상 메시지로 축하를 보냈다.

저서 '더임실, 더불어 김진명'은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실형 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 △피자컬 AI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 △햇빛배당을 활용한 지속가능 소득 모델 등 실행 중심의 정책 구상이 제시됐다.

김진명 저자는 "이 책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입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기록"이라며 "지원에 의존하는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입실을 만들기 위한 설계와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출마예정자는 햇빛배당 입실네트워크와 피자컬AI입실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아 지역 에너지·산업 기반 확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만호 기자·입실=진홍영 기자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부산에서 1인 시위 나서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국주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이 지난 26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국주영 특보는 26일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지 제3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날 "제3 금융중심지 논의는 지역 간 몹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산업 구조 고도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서울·부산·전북이 각각 종합금융, 해양·파생금융, 금융·자산운용을 맡는 역할 분담이 상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지역 간 제조업 경쟁으로 바라볼 경우 국가 금융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들, 출판기념회 개최 잇따라

박용근 도의원, 내일 '함께가는 리더십'

전북 장수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수한누리전당에서 '함께 가는 리더십'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책의 집필 취지와 핵심 메시지를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함께 가는 리더십'은 조선 시대 명



재상으로 평가받는 황희의 삶과 정치 철학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본질을 조명하는 교양서다.

박 의원은 황희의 생애를 따라가며 권력의 중심에서

있으면서도 사람을 잃지 않았던 지도자의 조건을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냈다.

황희는 태종·세종 등 네 명의 임금에 섬기며 약 60년간 관직에 몸담았고, 그중 24년을 재상으로, 18년을 영의정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책은 이러한 화려한 이력보다 황희 정승의 관대함과 공정한 청렴,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는 가치에 주목한다. 왕과 신하, 백성 모두에게 존경받았던 배경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사람 중심 정치의 의미를 짚는다. /이만호 기자

국주영은 도의원, 내달 2일 '국주영은의 공감'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지낸 국주영은 도의원이 오는 3월 2일 전주대학교 허림기념관에서 저서 '국주영은의 공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시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3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책을 매개로 한 북콘서트와 저자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시작으로, 2부 북콘서트, 3부 저자와의 만남 순으로 이어진다.

행사에서는 저자의 저서 집필 배경과 정치 철학, 전북 최초 여성 도의회의 의장으로서의 의정 경험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메시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국주영은의 공감'은 국 전 의장의 정치 여정과 의정활동을 정리한 책으로, 전주시의회 재선의원과 전북도의회 3선 의원을 거치며 추진했던 각종 정책과 복지·여성·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등을 담고 있다.

국 전 의장은 지난 1월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고향사랑 기부 혁신 방안 제시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가 3년 연속 전북 최하위에 머문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직·홍보·사업 전반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 및 홍보 전담 조직 신설 △어르신 병 및 동행 서비스·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등 기부자 선호를 반영한 지정 기부사업 확대 △시민 제안 및 공모를 통한 맞춤형 기부사업 도입 △민간 플랫폼 활용을 통한 민간 협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내 목을 쳐라, 완주는 못 내준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전주 통합 지지 결단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오직 완주 지키는 데 집중"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26일 차기 지방선거(도의원·군의원)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며 완주·전주 통합 지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을 선택했다.

유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며 "공천이라는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완주를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찬성 의견 요구에 대해 "실질을 넘어선 압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천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들이 공천의 향방을 암시하는 순간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의 의결은 어떠한 공천권과도 맞바꿀 수 없는 문

제라며 "완주의 존속은 정치인의 유희를 따질 사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불출마 배경에 대해 그는 "의정인 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면 완주 수성의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정치적 미래를 내려놓고, 임기 마지막 날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사봉을 지키겠다"며 "동료 의원들이 공천 압박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방패가 되겠다"고 의회 내부의 결속을 호소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농업 기반, 로컬푸드 체계, 산 일당지 구조, 재정·복지 시스템 등 완주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재정 분석과 법적 검증, 주민 동의 없는 속도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주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외부 압박에 의해 결정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주=염재복 기자